



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추진방향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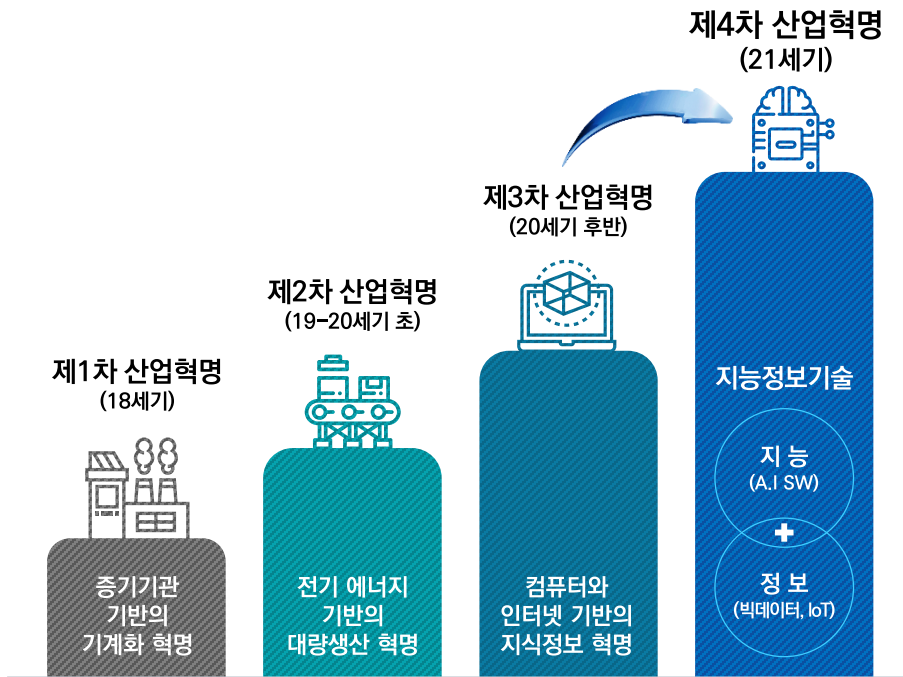
CONTENTS

- I. 고등교육 환경변화
- II. 고등교육 정책방향
- III. 주요정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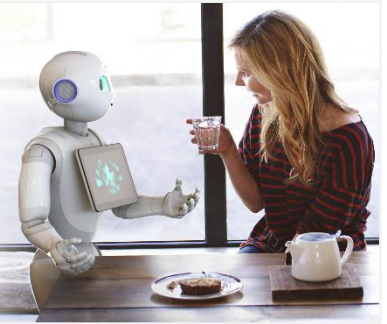
고등교육 환경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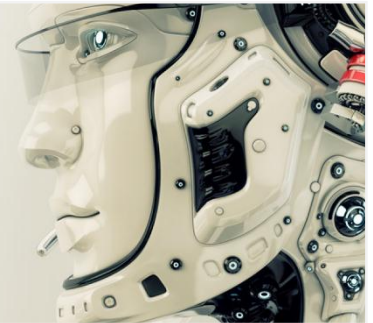
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창출 원천으로서 대학의 역할 중요



'25년까지 노동력
40%가 로봇으로 대체될
것으로 예측 ('15, BCG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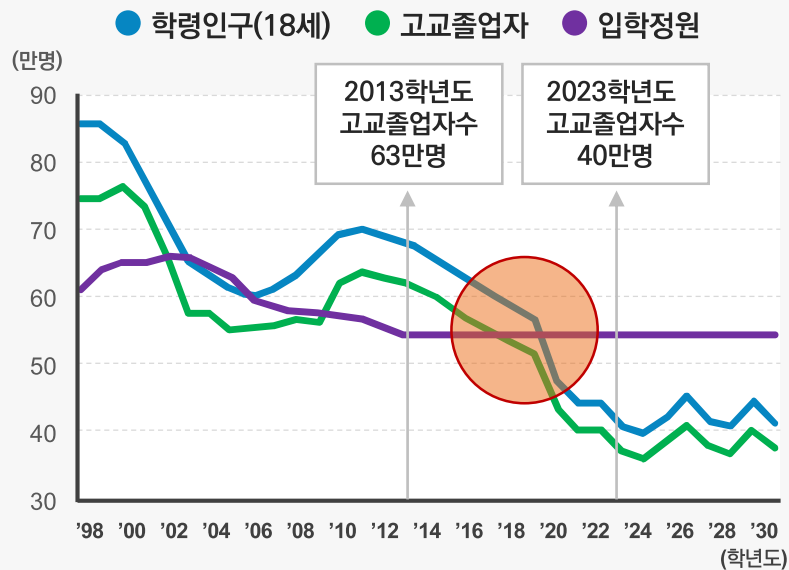
향후 10년간 인공지능의
경제적 효과는 3조달러로
예상 ('16, UBS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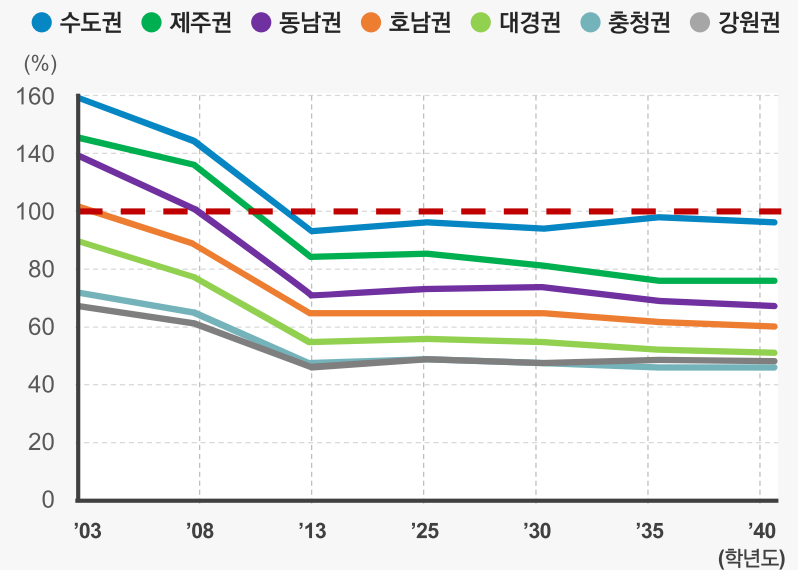
- 높은 전문성을 갖춘 **창의융합형 인재**를 양성하고
유망기술 선점에 필요한 연구 혁신을 통해 미래 변화 선도

저출산·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잠재성장동력 저하 우려

학령인구 및 고교졸업자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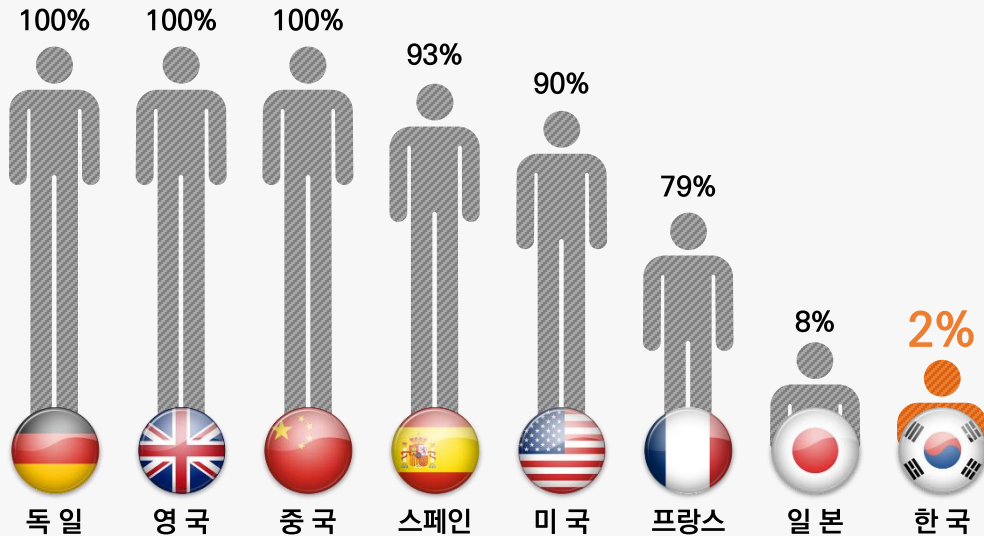
지역별 신입생 총원율 전망



- 대학의 적정 규모 조정 및 부실·비리대학 구조개혁 시급
- 지방대 및 전문대 미충원에 대비하여 정책적 배려 필요

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

국공립 정부 의존형 전문대 재학생 비율(OECD, '16)



2020년까지 710만개 직종이 사라지고 200만개의 직종이 새로 생길 것 (다보스포럼, '1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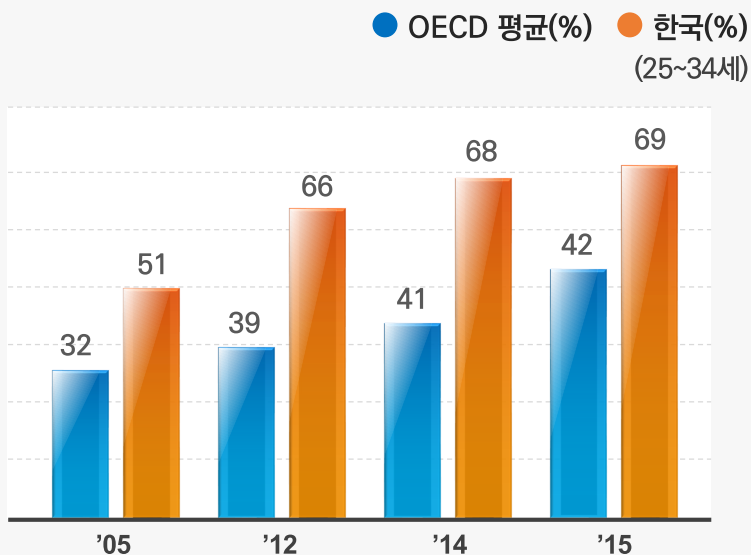


- 100세 시대를 맞아 단기 직업전환교육, 재취업교육 등 고등직업교육의 폭발적 수요 증가에 체계적 준비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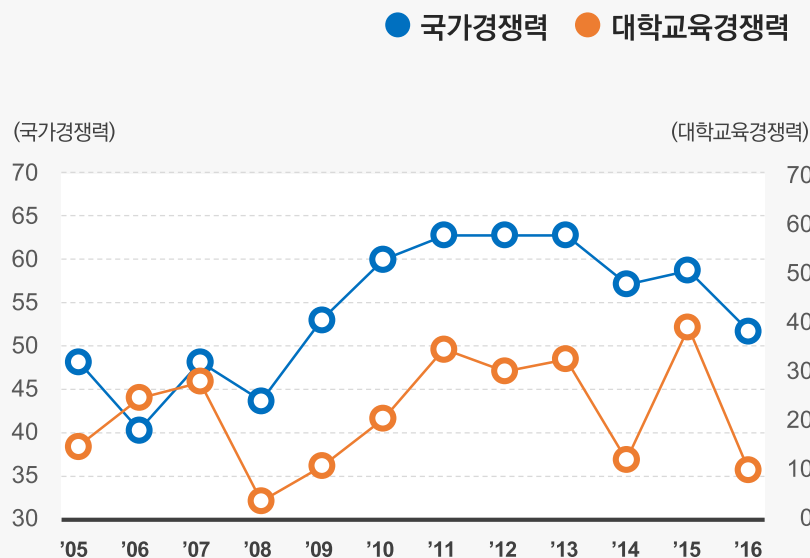
4 고등교육정책 패러다임 전환

➔ 양적 성장에 치우친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시급

고등교육 이수율 변화



대학 경쟁력 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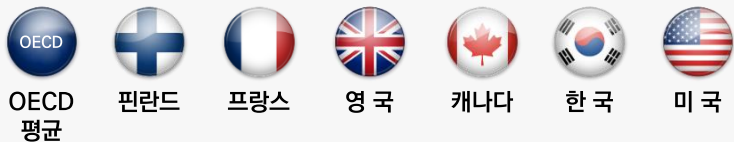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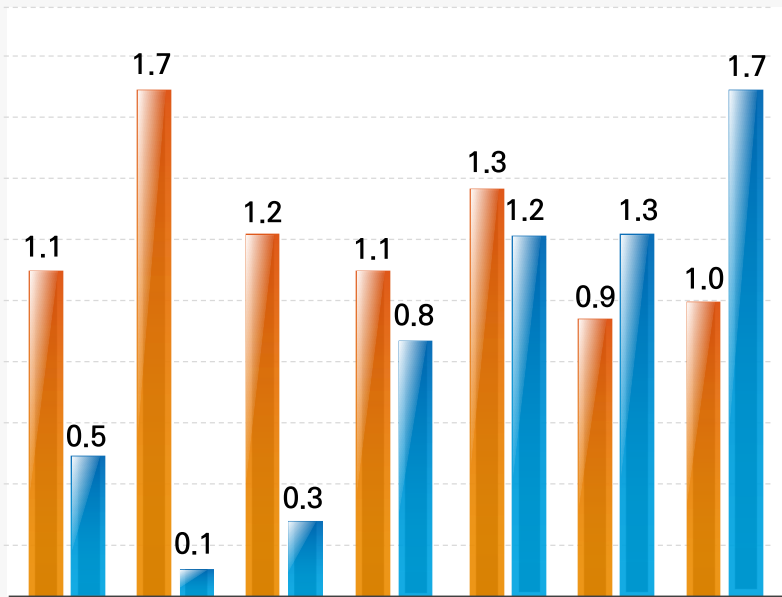
- **국립대는** 기초보호학문 육성, 지역발전 견인 등 **공공성 강화**
- **사립대는** **자율성**이 높은 재정지원을 통해 **교육여건 개선**

4 고등교육정책 패러다임 전환

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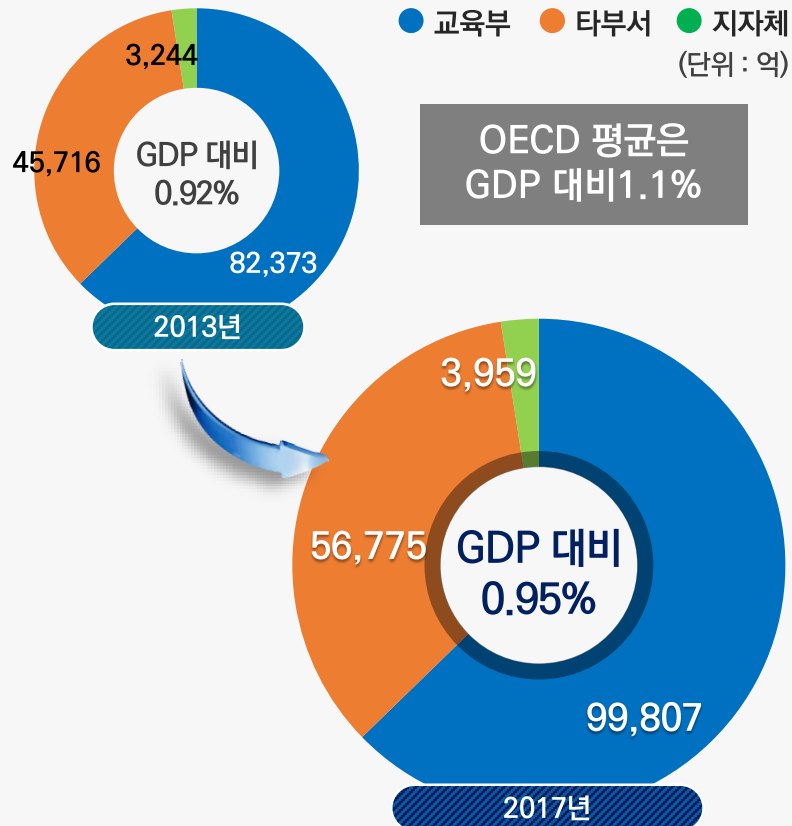
고등교육 재정부담 비교

● 공공부담(%) ● 민간부담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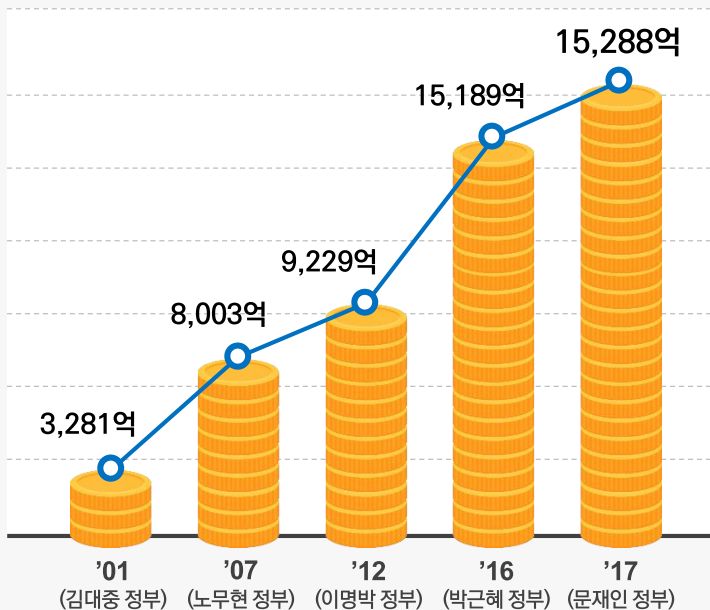
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비중

● 교육부 ● 타부서 ● 지자체
(단위 : 억)



4 고등교육정책 패러다임 전환

대학 재정지원사업 규모 변화



주요 대학 재정지원사업 현황('16년)

연구 지원	사업명	규모 (억 원) / 개수
특성화 지원	BK21 플러스	2,725억/545개단
	수도권CK	542억/79개단
	지방대CK	1,925억/258개단
	ACE	594억/32개교
	PRIME	2,012억/21개교
	CORE	600억/19개교
	평생교육단과대학	300억/9개교
	We-Up	50억/10개교
	SCK	2,972억/83개교
	산학협력지원	LINC
LINC 전문대		195억/30개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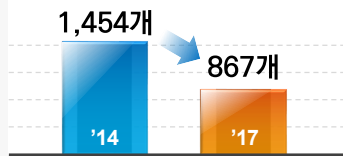
- 대학 경쟁력의 근간인 **기본역량 제고**를 위한 **일반재정지원 확대**
- 대학 간 **소모적 경쟁**과 **대학 자율성 저하** 문제 **해소 필요**

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필요

그 동안 노력

대입
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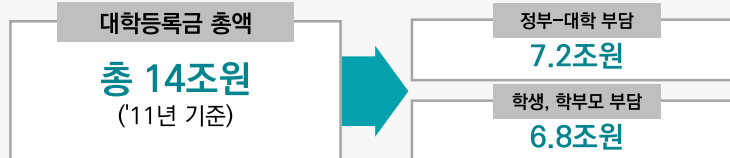
대입전형 간소화



대입정보포털
(ADIGA) 개통('16)

국가
장학금

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확대



사학
비리
근절

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 강화

감점 상향, 제한기간 확대 등
대학 재정지원사업 공동 매뉴얼 개정('18.2.)

개선 요구



공정하고 투명한
대입 제도 개선



실질적으로
체감하는
국가장학금 지원



사학부정비리의
근본적 해결

고등교육 정책 방향





미래 변화에 선제적 대비하는
대학 교육 및 연구혁신 지원



시장주의, 경쟁중심 접근에서
공공성과 협력의 가치 회복



대학 재정지원방식의 전면 개편을 통해
대학 자율성 및 투자 효과성 제고



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
공정하고 투명한 정책 추진



비전

창의·융합형 혁신인재,
건강한 시민 양성

‘대학’을 ‘대학’답게

목표

공공성
강화



자율성
확대



교육의
질 제고



대학 체질 개선 지원

- 국립대 및 강소대학 육성
- 공영형 사립대 도입
- 사학비리 근절

전략적 대학 특성화 유도

- 기초/도전 연구 강화
- 대학교육 혁신
- 산학협력 활성화
- 전문대 직업교육의 질 제고

공정한 기회 및 과정 보장

- 대입 단순화 및 공정성 제고
-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
- 취업 및 창업 지원 강화

맞춤형 진단 및 상향식 지원

대학진단

대학 기본역량 진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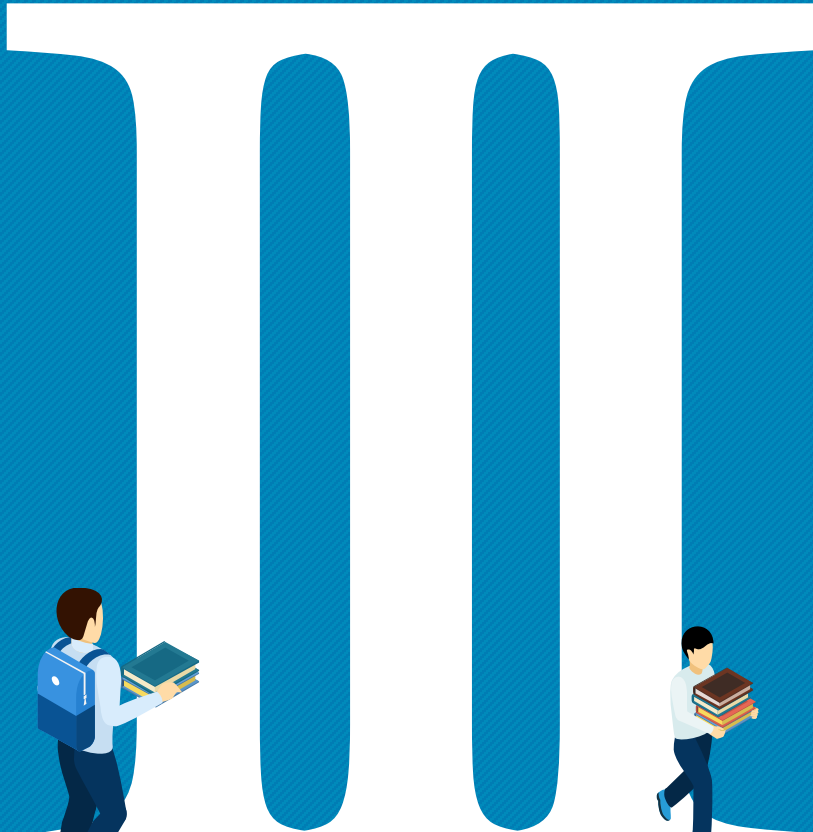
재정지원

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



제도개선

학사, 재정분야 제도개선



주요 정책



1 고등교육 질 제고 기반 구축

기본방향

➔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기본역량 향상과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여 고등교육 질 제고

< 고등교육 질 제고 로드맵 >



1 고등교육 질 제고 기반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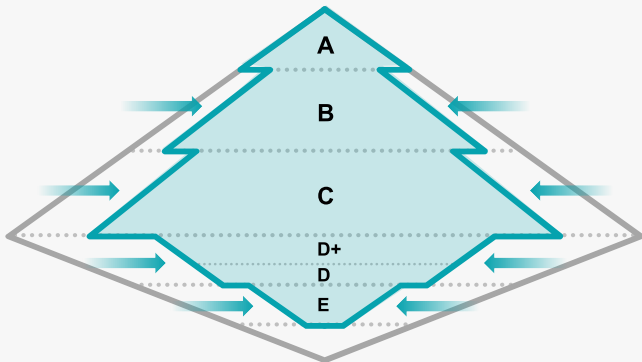
01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

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양적 조정 위주의 획일적 구조개혁 평가를 “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”으로 개선

※ 현장의견 수렴 : 1차('17.8.25), 2차(9.22~27), 교원단체 간담회(9.29, 10.16, 10.26, 11.2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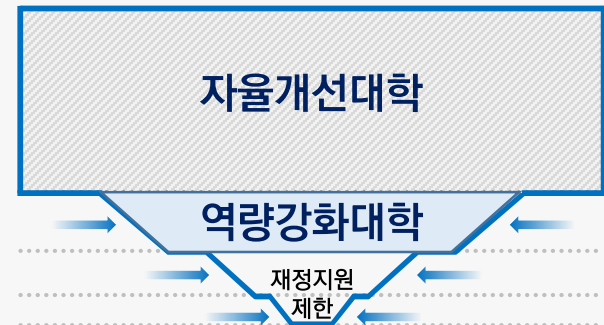
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

- 양적 감축에 초점
- 전국 단위 6등급 구분
- 평가와 연계한 지원 부재
- A등급(16%)외 모든 대학에 정원 감축 권고 및 재정 사업 연계 감축



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

- 진단 및 지원 강화
- 일정수준 이상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(권역별 균형 고려)
- 자율개선대학 및 역량강화대학(일부)에 일반 재정 지원
- (자율개선대학) 정원 감축 권고 미 실시
- (역량강화·재정지원제한대학) 합리적 수준 감축 권고



1 고등교육 질 제고 기반 구축

01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

➔ 대학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대학 진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

현장진단 강화			지표별 진단팀 운영			대학과 소통·공유	
	기존	개선		기존	개선	• 모든 대학에 진단정보 제공	
일반대 전문대	하위 20% 마실시	하위 30% 내외	대학별 위원	7~9명	40명 내외		

➔ 대학 진단·지원 기제로서 법률 제·개정 추진

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	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대학 구조개혁법 제정 추진 정원감축, 기능전환, 폐교 및 퇴출경로 마련 등 평가를 통한 조치 근거 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대학 진단·지원 강화에 대한 법률 제정 추진• 부실비리대학 폐교 시, 교직원, 학생 등 피해 및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「고등교육법」 개정 추진 검토

1 고등교육 질 제고 기반 구축

01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

< '대학 기본역량 진단' 추진 일정(안) >



1 고등교육 질 제고 기반 구축

02 중장기 대학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

➔ 대학 재정지원사업 단순화 및 일반 재정지원 확대

일반재정지원사업

- 대학 기본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
- 일정 수준 이상 대학 (자율개선대학, 역량강화대학(일부)) 지원



특수목적지원사업

- 산학협력, 연구사업 중심 통폐합
- 대학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방식 개선



➔ 대학의 예측 가능성, 사업 간 정합성 및 효과성 제고

- 대학이 수립한 하나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각 사업 평가에 활용
-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 재정지원 또는 신청자격 부여

➔ 상향식 지원 방식으로 개선하여 대학 자율성 확대

-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설계(Bottom-up)

1 고등교육 질 제고 기반 구축

02 중장기 대학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

대학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(안)



03 대학의 자율 발전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

▶ 대학이 자율성을 가지고 여건, 특성에 맞는 중장기 발전을 추진토록 전 분야 규제 개선

기본방향	학사 분야	재정 분야	국립대 운영 분야
	대학 학사 운영의 폭 넓은 자율성 부여	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 및 건전성 확보	대학 자율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 간 협력 촉진
규제 개선(안)	<p>1 단계</p> <p>▶ 「고등교육법시행령」 개정 완료 ('17.5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학기제, 유연학기제 • 융합전공, 전공선택제 등 <p>⇓</p> <p>2 단계</p> <p>▶ 「고등교육법」 개정 완료 ('17.11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• 학습경험인정제 • 통합과정 중 학위수여 등 	<p>▶ 사립학교법 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확보율을 초과하는 유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변경 허용('18년 예정) <p>▶ 산학협력법 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비율과 자회사 지분비율 완화 	<p>▶ 국립대학법(안) 마련('18)</p> <p>▶ 산학협력법 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학 간 학점 인정 기준 완화 (현재 1/2) <p>▶ 국립학교설치령 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립대 하부조직운영 자율성 확대

2 대학 체질 개선 지원

기본방향


- 대학별 설립목적, 특성에 맞는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학비리 근절 추진
- 이를 통해 대학 네트워크 구축 및 공영형 사립대 도입 추진

< 고등교육 체제 개편 방향 >



01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체제 개편

➔ 대학 설립목적, 특성에 맞는 기능 및 역할 강화 지원

	국립대 육성	지역강소대학 지원 확대	공영형 사립대 도입
목적	국립대 공공성 및 경쟁력 제고	고등교육 균형 발전	사립대 공공성 제고 및 건전사학 발전지원
지원방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립대 공적 역할 및 강점 분야 경쟁력 제고 • 기능별, 중점 분야별 특화를 바탕으로 대학네트워크 확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 강소대학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재정지원 확대 • 강소대학 집중 지원하여 교육혁신과 지역균형발전 선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발전 가능성 높은 사립대에 정부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공공적 역할 부여
향후의 일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립대 육성방안 마련('17. 하) • 국립대 혁신지원 사업 확대·개편('18. 상) <p>※ 연 800억 수준, 전체 국립대 39교 지원</p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책연구, 공청회 등을 통해 공영형 사립대 도입 방안 마련 

02 / 고등교육 정상화 및 교육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사학비리 근절

➔ 사학의 자율적인 운영 건전성 및 정상화를 지원하고 사학발전을 위한 법·제도 개선

※ 사학혁신위원회 구성(2017.12.~) 및 사학혁신지원과 신설(2018.1.1.)

5대 중점과제 집중 추진



02 고등교육 정상화 및 교육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사학비리 근절

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하여 사학비리 근절 추진

비리임원 복귀 제한 강화

- 비리임원 선임 제한 기간 확대 (5년 → 10년)*
*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 의원 발의(의안번호: 10987)
- 비리임원 선임 제한 사유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('18.하)
- 사학 감리주기 단축(15년 → 5년)



사분위 심의 원칙 제도화

- 이사 선임을 위한 사분위 심의 과정에서 임원취임 승인 취소된 자 등 비리 임원의 이사추천 제한 사유를 법령에 규정
※ 「사립학교법」 시행령 개정('18.상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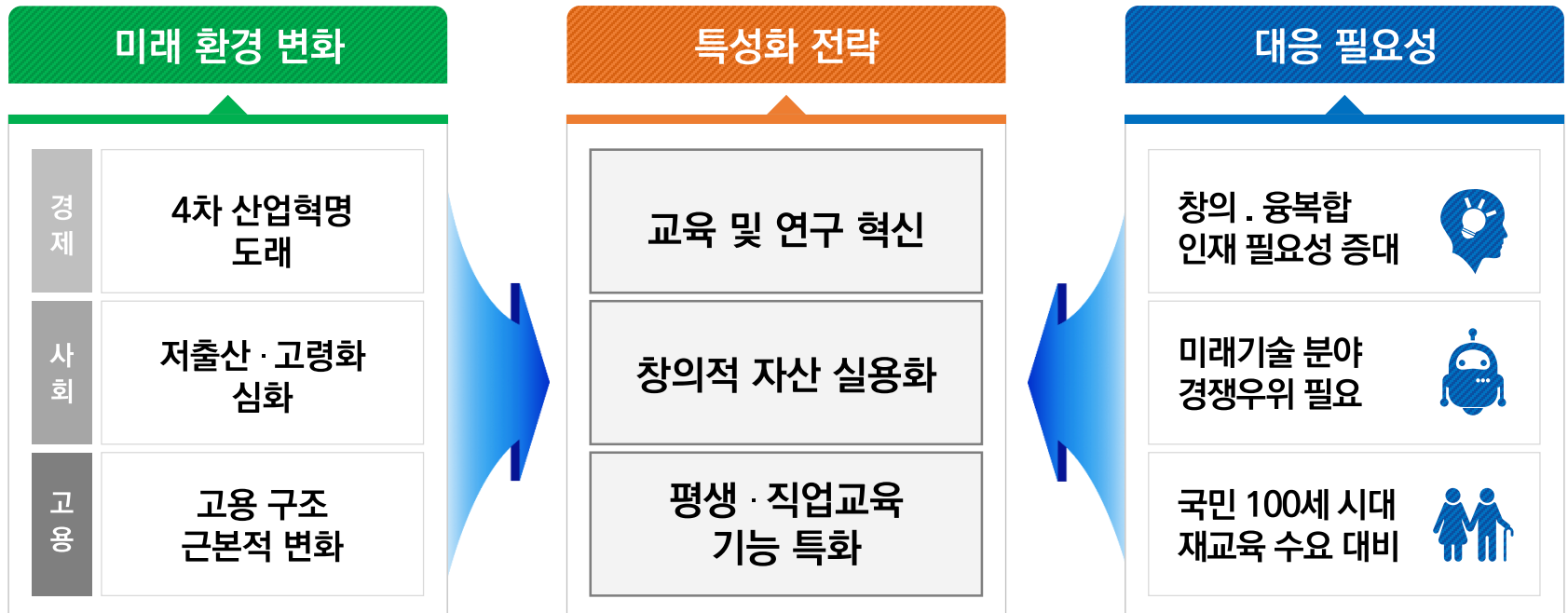
3

전략적 대학 특성화

기본방향

4차 산업혁명, 저출산·고령화 등 미래 변화에 선제적 대비하고 국가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략적 대학 특성화 지원

< 대학 특성화 전략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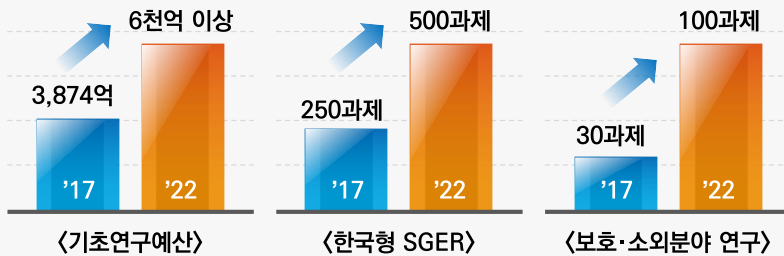


01 대학 연구 및 교육 혁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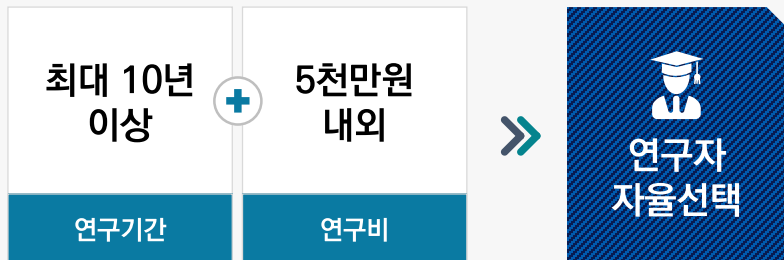
▶ 창의적 인재 양성 및 연구 진흥을 위해 교육 및 연구 혁신 추진

기초/도전적 연구 지원 확대

- 대학의 순수 기초분야 연구 지원 강화(2배 이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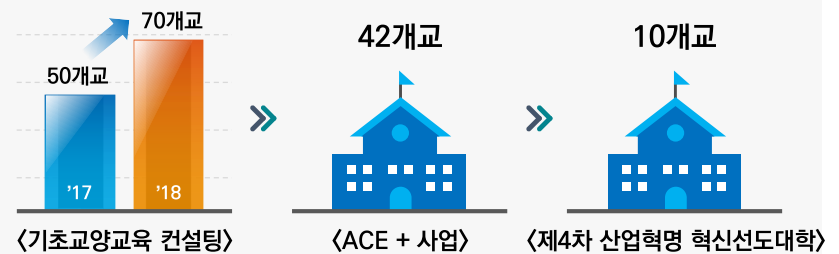


-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 연구 환경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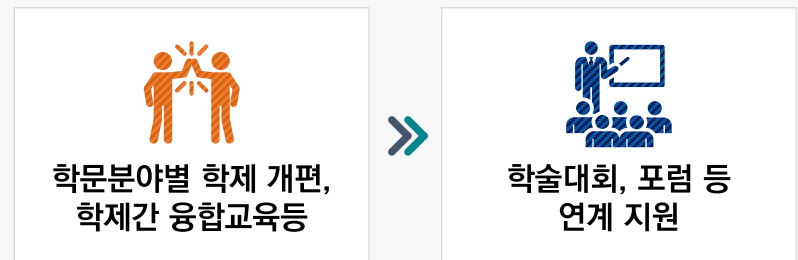


대학 교육 혁신

- 기초교양교육 및 융복합 교육 지원 확대



- 현장 중심의 대학 교육과정 혁신 활성화 유도



02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학협력 및 직업교육 질 제고

▶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 활성화 및 평생직업교육 시대에 대비한 전문대 질 제고

산학협력 활성화

• 대학-기업 간 상시적 협력 지원 강화

혁신도시 중심으로
대학-지자체-공공기관
클러스터 구축



대학 내 유희부지를
활용하여 기업, 연구소
입주 지원



•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촉진

대학 간 공동기술개발
및 패키징 활성화로
융복합 기술사업화 촉진



실용화 초기 단계
부터기업이 참여하는
기업참여기술
사업화



전문대 직업교육의 질 제고

• 생애주기 맞춤형 직업교육 체제 구축

미래형
직업트랙
마련

전문대
교육과정
내실화

수요자
맞춤형
직업교육

전문대
교육과정
다양화

先 교육훈련
경험제 등

NCS 기반
교육과정
개선 등

취업·창업
직무역량강화,
직업 2모작 등

유연학기제,
집중이수제 등

• 국가-지자체-전문대 평생직업교육 협력 강화

※ (고용부) 훈련기관인증평가 간소화
(지자체) 지역별 평생직업교육위원회
구성 및 운영 등



4

공정한 고등교육 기회 및 과정 보장

기본방향

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 제공 및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창의·융합형 인재 양성

< 고등교육 단계별 핵심 과제 >



01 공교육 혁신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 추진

대입 단순화



학생부와
수능위주로
단순화



논술 전형 축소 및
교과특기자 전형
단계적 폐지 유도
(18~)



대입정책 발표
시점 법제화
(17~)

대입 공정성 제고

-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 및 확대
※ 2021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반영('18년)
- 취약계층 및 지방인재의 의전원, 법전원 입학기회 확대 및 장학금 지원 강화
※ 지방대 의학계열 지역인재등 선발 의무화
법전원 취약계층 학생 선발비율 확대(5%이상→7%이상)

대입 투명성 제고

- 대입 블라인드 면접 도입('18.상)
- 입학사정관 회피·제척 근거 마련('17.하)
- 입시·학사비리 직접 관련 대학 재정지원 중단·배제 강화

중장기 대입제도 개선

- 대입정책포럼 운영('17.12~)
※ 고교, 대학 등 다양한 교육 주체참여
- 학생 성장중심의 새 정부 교육개혁방안 마련('18.8)



02 대학생 학업 전념을 위한 지원 내실화

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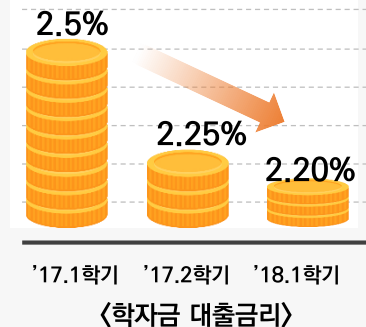
-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

※ 대학 장학금 향후 5년간 약 1조원 추가 지원



학자금 대출금리 인하

- 대내·외 금리 상황을 고려하여 학자금 대출 금리 단계적 인하 추진



대학 입학금 축소·폐지

- 대학 입학금 단계적 축소·폐지 추진



대학의견수렴



대학자율
입학금 인하 유도



입학금 축소·폐지
관련 법령 개정 추진

다양한 유형의 기숙사 확충

- 대학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(실입주 3만명) 확충

※ 공공·연합 기숙사,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및 학생종합복지센터, 국립대 BTL 기숙사 등 건립



기숙사 수용인원 50,000명

0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및 취업 지원 강화

➔ 대학(원)생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창업 도전 기회 확대

온라인 창업플랫폼 구축

- 아이디어 개발부터 모의창업까지 창업 전 과정 지원



대학 창업펀드 지속 확대

- 실패에 대한 부담없이 도전 할 수 있도록 초기 자금 지원



대학원 창업 활성화

- 기술혁신형 창업 지원
- ※ 대학원 특화형 창업 선도대학('18)

8.2억



➔ 대학-기업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대학 진로교육 내실화

지원체계 내실화

- 대학 내 진로·취업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
- ※ 진로교육법 개정('18.상)



양질의 취업 정보 제공

- 기관간 정보 연계 강화 및 질적취업 제공

양적정보	질적정보
취업률 DB 정보	임금수준 고용형태 등

+

대학-기업 간 협력 강화

- 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
- ※ 참여기업 세액공제를 위한 산학협력법 개정('17)
-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확대





감사합니다



교육부